

GRI Trends In Perspective

2013년 8월 13일 (제14호)

발행 경기개발연구원

발행인 홍순영

주소 440-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50-3114

홈페이지 www.gri.kr

자료문의 전략연구센터(031-250-3126)

GRI TIP은 경제·사회의 동향과 이슈를 균형있는 관점에서 정리한 정책자료



아베의 성장전략 : 국가전략특구와 규제개혁

Points

일본 아베 정부는 국가전략특구 신설을 통해 국내외 인력 및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경제재생의 기폭제로 삼을 계획

- 대도시 위주로 운영되는 국가전략특구에는 세제우대 및 규제완화, 공공인프라의 민간개방 등이 추진되어 비즈니스 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 활성화 기대
- 기존 특구제도는 지자체 주도의 운영, 칸막이식 행정의 한계 등으로 경제성장으로 연결될만한 제도개혁이 미흡했으나, 국가전략특구는 총리가 주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시행할 계획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신설로 인해 향후 한·일간 특구경쟁 심화가 예상되므로, 국내 특구제도와 현행 수도권 규제에 대한 평가 및 대책 마련 필요

주택매매가격은 4·1대책 발표 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7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 주택전세가격은 11개월 연속 상승세

- 7월 주택매매가격은 전국과 경기도가 각각 0.07%, 0.24% 하락한 반면, 주택전세가격은 각각 0.3%, 0.27% 상승
-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으면 당분간 전세가격의 지속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4·1대책의 후속입법과 부동산세제 개편의 차질 없는 시행 필요

국가전략특구는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연계하여 일본 경제재생을 피하고자 하는 아베노믹스의 실험장

지난 7월 21일 아베정권의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아베노믹스를 집대성한 '일본 재흥전략(日本再興戰略, 6.14 각료회의 확정)' 추진에 탄력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탄력을 받은 아베 정부의 일본재흥전략에서는 세제 및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국가전략특구 신설을 통해 국내외 인력 및 자본을 유치하여 경제재생의 기폭제로 삼는 계획을 제시

- 일본재흥전략은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고 일본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연계하여 실물경제 활성화에 주력
 - 세부적으로는 산업기반 강화, 전략적 신시장 개척, 글로벌시장 진출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개별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
- 향후 10년간 평균 명목성장률 3% 및 실질성장률 2% 실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GNI)을 10년후 현재보다 150만엔(1만5천달러) 이상 증가를 목표로 설정
 - IMF는 금융 및 재정 확장정책을 넘어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이 수반된 성장전략의 효과적 수행 여부가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

일본재흥전략에서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제시

- 대도시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완화와 세제우대 등을 통해 국내외 인력과 자본을 유치하고 대도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재생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계획
 - 이전에도 구조개혁특구(2002년), 종합특구(2011년) 제도가 시행됐으나 지자체 주도의 운영, 칸막이식 행정 등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대담한 제도개혁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
 - 국가전략특구는 총리 주도로 지정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
- 정부는 국가전략특구를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이 결합되는 실험장으로 인식
 - 국가전략특구는 세제우대 및 규제개혁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와 공공인프라 민간개발이 핵심
 - 국가전략특구는 여러 지역을 분산·지원하던 기존 특구제도에서 탈피하여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다양한 유형의 특구를 조성한다는 방침
 - 국제첨단슈퍼특구(국제비즈니스 거점), 농업거점특구, 의료관광특구, 이노베이션특구(일본판 실리콘밸리), 아시아연구개발거점특구, 전력시장개혁특구 등이 예시로 거론

■ 국가전략특구의 규제개혁 예시

지역	규제개혁 예시
토쿄도 (東京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의사의 국내 진료행위 인정 ▶ 해외 일류 초·중·고 유치 ▶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구급차 및 약사, 긴급의료상담콜센터 운영 ▶ 카지노, 호텔 등을 복합화한 통합형 리조트 건설 ▶ 지하철 일원화, 도영교통(都營交通)의 24시간화 ▶ 도시계획 용적률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
오사카부·시 (大阪府·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이노베이션 특구 설치 및 특구내 법인세 대폭 인하 ▶ 연구기관 등에 대한 기부공제 확대 ▶ 공설민영학교 설립규제 완화 ▶ 카지노, 호텔 등을 복합화한 통합형 리조트 건설 ▶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영화, 광역관리
아이치현 (愛知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도로 운영권 민간개발 ▶ 공공도로에서 자동주행 실험 ▶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특구 설치 및 특구내 법인세 대폭 인하 ▶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자료 : 第6次 産業競争力會議(2013.4.17)

국가전략특구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추진 기조 하에 총리 주관의 '특구 자문회의'와 특구별 '3자 통합본부'를 주축으로 운영

- 중앙정부는 총리가 주관하고 민간전문가,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특구자문회의를 설치하고, 특구담당대신(장관)을 임명
 - 특구자문회의에서는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중앙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조치 및 권고사항을 제안
- 각 특구에서는 특구담당대신, 지자체장, 민간(지역사업자 등의 대표)이 참여하는 국가·지방·민간의 3자 통합본부를 설치
 - 특구별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동하여 직접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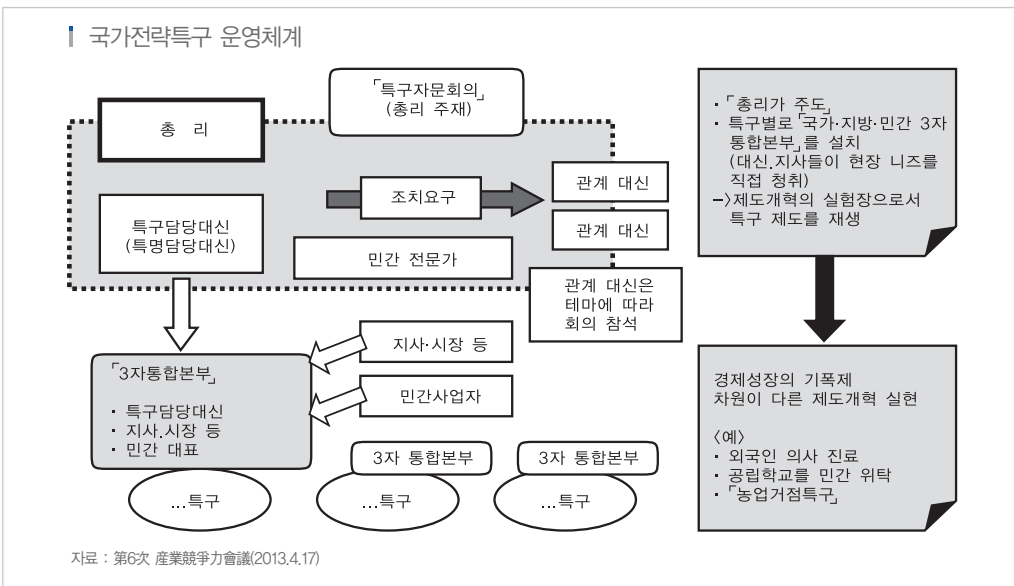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신설로 인해 향후 한·일간 특구경쟁 심화가 예상되므로, 국내 특구제도 및 수도권 규제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아베정부의 개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법인세율 인하, 대도시 위주의 지원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

-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입지경쟁력 강화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 활성화 기대
-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대도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 확대,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
 - 법인세율 인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특구 위주로 도입하는 것은 규제개혁 의지의 후퇴라는 지적도 있음

한국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제도의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특구제도의 보완을 통해 입지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현재 국가전략특구 제도는 기본방침만 결정된 상황으로, 8월 이후 대상지역 5~6개소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규제개혁 사항을 결정할 계획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제도 신설로 인해 향후 한·일간 특구경쟁 심화가 예상되므로, 국내 특구제도(경제자유구역 등) 및 수도권 규제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투자활성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 **GRI**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4·1대책 발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을 끝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였고, 경기도 등 수도권도 일제히 하락

- 7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7% 하락하였고, 수도권의 경우 0.3% 하락
 - 4·1대책 발표 이후 4~6월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취득세 감면 종료와 비수기 영향에 따른 거래 감소, 취득세 영구인하 등 정부의 후속대책 논의에 따른 관망세 확대로 7월 들어 다시 하락
- 경기도는 신규아파트 공급물량 누적 등의 영향으로 가격상승세 전환이 지체되어 5월부터 상승세에 접어들었으나 2개월 연속 상승 후 7월 0.24% 하락

7월 들어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한 반면, 주택전세가격은 11개월 연속 상승세로, 주택매매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당분간 전세가격의 지속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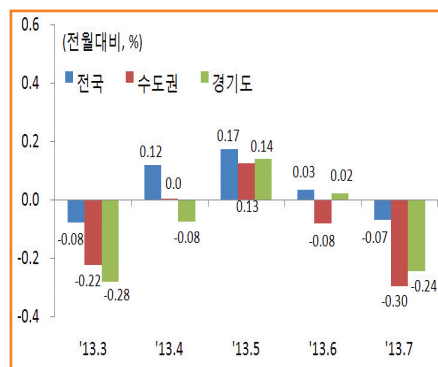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2012년 9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경기도 등 수도권도 지속 상승세

- 7월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비수기임에도 전월대비 0.3% 상승, 수도권은 0.39% 상승
 - 가격상승 기대감 저하, 정부대책에 대한 관망으로 인한 주택구입 유보(전세수요 증가), 저금리에 따른 월세 전환 증가(전세공급 부족)로 전세가격이 11개월째 지속 상승
 - 특히 서울 강남3구 등 거주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강남3구 및 강동구 0.85% 상승)
- 경기도는 7월 0.27% 상승하여 11개월 연속 상승세로, 과천(2.11%), 의왕(1.37%), 성남 분당(0.96%), 안성(0.88%) 순으로 높은 상승률 시현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당분간 전세가격의 지속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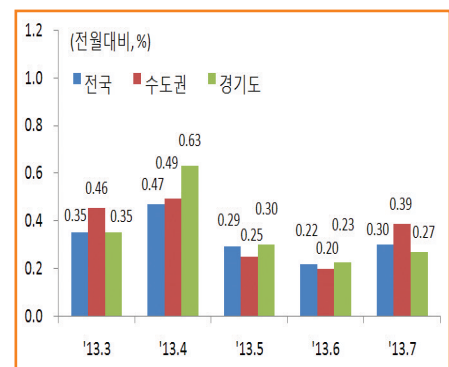
- 시장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의 후속입법과 부동산세제 개편을 차질 없이 시행
- 전세수급 불균형 완화 및 저소득 전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전세주택 활용 유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조기공급 등을 추진 **GRI**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감정원

지역별 주택전세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감정원